

연구노트

- 유연근무제와 가족생활의 변화

홍승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성인지적 정책 의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 교통약자 이동욕구와 정책 수요의 성별차이

마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V) : 돌봄여성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

오은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I) : 대학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안상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

김은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연근무제와 가족생활의 변화

홍승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제기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남성과 여성들은 노동자로서, 또 부모로서 생활해 나가면서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로써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요구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취업부모들의 일·가정 양립 갈등은 개인, 기업, 국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개인의 측면에서는 육아기에 있는 여성들의 취업을 중단하게 하는 위협이 되고, 기업의 측면에서도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근로자의 취업중단은 인력유지 및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지 못하여 인력활용의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하고, 자녀출산을 최소화하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자녀가 있는 취업부모의 경우에는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져 추가출산을 중단하는 등 복합적인 저출산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를 취업부모의 일·가정양립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유연근무제 이용경험과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유연근무제가 이들의 가족생활 및 일·가정양립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2.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 취업부모로서 1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근로자 3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취업중단의 위기를 극복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 취업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유연근무제로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재택근무는 임신한 경우에서부터 시작하여 출산후 수유를 하는 경우,



아기가 어린 경우, 아이가 커서 학습지도가 필요한 시기까지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유연근무제로 전환한 과정은 취업중단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 준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자녀양육의 단계별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간 전략이 되고 있었다.

2) 가족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들

취업부모들은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면서 가족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가족시간이 증가(38.4%)하였으며, 가족생활에 긍정적인 변화(43.6%)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특히 여성이 체감하는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가족시간에서는 여성이(46.0%) 남성보다(34.0%) 가족시간이 증가하였으며, 가족생활의 변화에서도 여성이(52.2%) 남성보다(38.7%)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 취업부모들은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지 않는 취업부모들에 비해 일·가정 양립 갈등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로써 유연근무제를 통하여 노동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며, 노동장소를 변경시키는 방안은 취업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유연근무제 이용의 성별화된 경험

한편, 취업부모의 유연근무제 이용은 성별화된 경험을 결과하고 있었다. 우선,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주된 사유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 제고(51.5%) > 회사의 업무방침(33.5%) > 출퇴근 문제(8.2%)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 제고(41.6%) > 자녀양육(25.7%) > 회사의 업무방침(21.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무제의 이용이 업무 효율성이나 회사의 업무방침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의 지원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여성은 자녀양육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었다.

또한 유연근무제 이용 이후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를 남녀가 모두 경험하고 있으나, 그 여유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은 주로 자녀양육 및 교육(75.8%), 자녀와의 취미생활(14.4%), 가사노동(10.1%) 등의 순으로 사용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교육(46.5%), 자신의 취미생활(21.1%), 자녀와의 취미생활(12.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역시 여성의 경우 유연근무제 이용으로 생긴 여유를 자녀에게 전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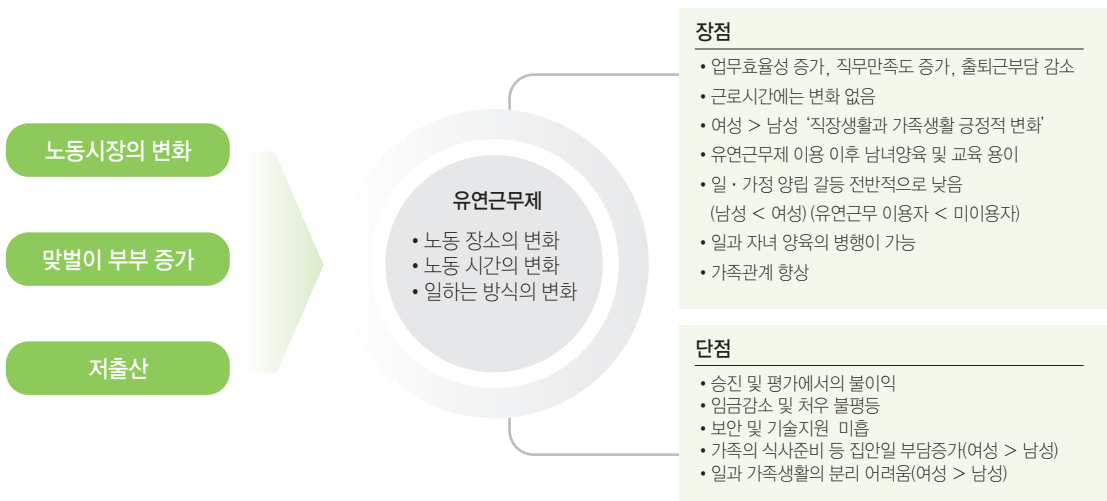
4) 유연근무제의 양면적 특성

유연근무제 이용으로 인하여 얻게 된 가족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들은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수단은 되었지만, 그 변화의 결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유연근무제 이용의 이유나 유연근무제 이용 이후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에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서 훨씬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 이용으로 여성들이 “일자리 질 하락”의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심층면접 참여자들 중의 일부는 오히려 유연근무제로 전환하면서 승진, 평가, 임금, 지위, 그 외 복지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이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문제는 유연근무제 확산 이전에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유연근무제 이용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됨과 동시에 “일자리 질 하락”의 위험성과 가족 내 불공평한 성별 역할분담을 가중시킬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면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 일·가정양립의 관점에서 본 유연근무제

3.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유연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취업부모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유연근무제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정지(整地)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사항은 유연근무제를 이용함으로써 받게 되는 승진, 평가 등에서의 불이익과 그 외 조직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유연근무자에 대한 기회 불균등의 문제(휴가, 보너스, 기타 혜택 등)



였다. 따라서 유연근무제의 도입원칙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유형 중에서 업무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다. 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을 특정대상으로 우선적용할 경우 자칫 유연근무제의 이용이 특혜나 혜택으로 인식되거나 혹은 오히려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저급의 일자리”로 하락하게 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전사원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유연근무제의 단순한 확산을 넘어서 유연근무제도의 이용이 취업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는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취업부모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특히 가족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연근무제도 이용으로 일과 자녀양육 및 교육의 병행이 용이해졌으며, 일·가정양립 갈등 수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장려하는 “아버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의 가족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도 퇴근 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성인지적 정책 의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 교통약자 이동욕구와 정책 수요의 성별차이¹⁾

마 경 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제기

2000년대 초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기초가 된 이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정책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도구가 도입되었다. 주지하듯이 성 주류화는 여성정책 전담부서 뿐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와 조직들이 정책의 기획, 수립, 시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성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자는 일종의 ‘행정개혁’이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와 같은 제도들은 성불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일반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성 주류화 시행 수단이다

성 주류화 시행 수단의 사용에서 ‘성인지적’ 관점은 기존의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만, 그 의미를 명료하게 정의하지 않을 경우 정책 또는 예산 분석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수치를 같게 하는 수량중심의 기계적 평등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 특정 사업에 여성 수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예산회계년도의 성과목표에서 여성 비율을 낮추고, 남성 수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남성의 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성인지적 관점이 이처럼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숫자를 같게 만드는 양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모든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과 자원이 이미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고, 정책에 따라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의 수가 같은 상태를 ‘성인지적’이라고 보는 것은 성평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욕구와 정책 수요의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이에 기초한 성인지적 의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에서의 성별 욕구와 정책 수요의 차이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에 기초하여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정책 의제를 도출하고 이러한 논의가 성 주류화 도구 사용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¹⁾ 이 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1년도 연구보고서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교통약자 이동욕구 및 정책수요의 성별차이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마경희·장미혜·김효선·유정미)의 일부를 수정·요약했음.



2. 연구 범위와 방법

제한된 시간과 인력 등 연구 여건상 교통약자는 이동제약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²⁾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의 범위는 서울 지역으로 제한³⁾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했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이 연구는 장애인, 고령자 이동욕구와 정책 수요의 성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질적 연구를 통해 의제의 영역을 도출하고, 양적 연구를 통해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거쳤다.

질적 연구 방법은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네 집단(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과 성별을 교차하여 8개 집단, 노인은 두 개의 연령집단(65-74세, 75세 이상)과 성별을 교차하여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전체 12개 집단 59명에 대해 초점집단 인터뷰를 수행했다. 조사는 2011년 4월-6월 사이에 2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한 집단당 조사시간은 2-3시간이 소요되었다. 질적 연구를 통해 성별 차이의 영역을 도출한 후 질문지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지 조사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 1,000명,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수는 각각 장애유형과 성별, 연령과 성별을 층화 변수로 설정하고 모집단 분포에 따라 비례 할당했다. 조사는 2011년 7월-9월 사이 2개월 동안 1:1 대면조사로 이루어졌다.

3. 교통약자 정책의 성인지적 의제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인터뷰와 질문지 조사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의 정책 의제를 도출했다.

첫째, 대중교통 이용행태의 측면에서의 정책 의제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여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률과 사고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이다. 장애여성과 노인여성은 자가운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일반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지하철의 편의시설 개선에 정책적, 재정적 우선순위를 두면서 부차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를 제기한다. 둘째, 여성의 낮은 교통정보 인식 능력이다. 여성, 특히 노인여성은 대중교통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하철과 버스 이용 시 도움을 주는 타인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장애여성의 높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이용과 낮은 접근가능성이다. 장애여성은 자가운전 비율이 낮아 남성보다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다른 교통수단을 더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하여 활발한 이동지원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상의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뿐 아니라 임신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을 포괄함.

3)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만 장애인 내부의 이질성과 교통약자 이동 인프라 등에서 지역별 격차가 커서 모든 가능한 변수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의 어려움으로 지역을 서울로 제한했다.

둘째, 여성의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의제이다. 이 역시 세 가지이다. 우선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과 이로 인한 교통비 부담이다. 여성과 남성의 월평균 교통비 지출 규모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장애여성과 노인여성은 남성보다 교통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장애인과 노인 모두 비교통약자보다 취업활동과 경제적 생활수준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각 집단 내 여성은 남성보다 취업활동을 덜하고, 소득수준도 낮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의 이동제약이 남성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노인여성의 취약한 건강이다. 노인여성은 남성보다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신경통, 요통 등 이동에 직접적인 제약이 되는 질병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는 지하철이나 버스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어려움을 크게 한다. 남성의 경우도 후기노인(75세이상)은 노인여성이 가지는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만, 전기 노인 남성은 노인여성에 비해 도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동에 대해 큰 불편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셋째, 장애 여성은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쾌함과 모욕감을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만, 이러한 불쾌한 경험은 이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지는 않더라도 심리적 불편을 주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 유형은 여성의 특수한 욕구와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정책의제이다. 이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장애여성의 경험적, 잠재적 성희롱·성폭력 피해이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장애여성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만 경험하는 위험은 아니지만, 교통약자 이동정책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성인지적 정책의제이다. 장애여성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택시기사 또는 특별교통서비스 기사와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부모의 자녀동반 이동의 어려움이다. 자녀에 대한 양육과 돌봄 책임은 부모 공동의 몫이지만, 대체로 어린 자녀는 여성들이 돌보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자녀를 동반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여성이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자녀와 이동 시 자가용을 덜 이용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장애여성 혼자서 이용하기에도 제약이 많은 교통수단으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이동은 여성 본인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매우 힘든 경험이 된다.

4. 교통약자 정책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교통약자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첫째, 일반버스 이용환경 개선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버스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도록 한다. 버스 배차시간과 간격 조정 및 버스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대중교통 안내 서비스의 확대이다. 대중교통 수단이 완벽하게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는 능력에서 절대적 한계가 있다면, 물리적 환경 개선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 장애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하철 역사에 안내원 배치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안내 서비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및 화상통화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셋째, 장애인 콜택시 확충 및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의무대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통약자 버스 이용요금의 할인 또는 면제제도 도입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의원발의로 「장애인 복지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인 교통약자까지 포괄하여 버스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지하철 승강기의 확장 설치 및 저상버스 도입 확대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하철 역사에는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의 수요가 너무 많이 교통 약자들은 승강기 이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리가 불편한 노인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장애인들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현재 승강기 수용인원을 확대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저상버스의 확대 설치에 휠체어 이용자 뿐 아니라 노인여성의 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여섯째,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제거, 보다 일반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종사자 교육의 내실화이다.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대중교통 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은 장애인 당사자가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필수적으로 장애여성이 종사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장애여성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동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택시기사와 장애인 콜택시 기사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철저히 해야 하며, 성희롱 신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제2, 제3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인적이 드문 시간과 공간에서의 범죄 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밝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1~2급 중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자격을 자녀를 동반하는 장애인 부모일 경우 3~4급으로 등급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일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중 하나이고, 의존적 존재로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특히 장애여성에게

게 더 강한 경향이 있다. 장애여성이 자녀와 다른 가족원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쉽게 인식되지 않고, 정책 또한 이러한 측면을 잘 고려하지 못한다. 자녀를 동반하여 이동하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5. 합의와 맺음말

성 주류화 시행 도구들이 시행의 취지를 살려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성인지적 의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인지적 의제는 여성과 남성의 욕구와 정책수요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시화시켜 줌으로써 정책 또는 예산 분석을 위한 관점이자 초점이 된다. 이를 통해서만이 성평등을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5:5가 되는 상태로 정의하는 수량화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성불평등 문제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여성 또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닐 경우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지는 욕구와 정책수요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책의 수혜자와 관련하여 이미 수집된 조사 통계, 사업실적 통계 및 보고 통계 자료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초보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욕구의 차이를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성 주류화 도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별도의 예산을 할당하여 성별 욕구와 정책 수요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을 보여주고자 했다.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수혜자들을 성별로 분리하여 초점집단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각 집단 내에서의 성별 요구의 차이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난 요구의 차이가 실제 경험적인 일반화를 가능케 하는 수준의 차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적 자료를 별도로 수집하는 절차를 거쳤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관계를 이러한 방식으로 설정하는 연구방법은 사실 그리 흔하지 않은 것이다. 양적 연구를 먼저 설계하고, 양적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질적 연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연구 관행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질적 연구를 먼저 수행한 후 양적 연구를 통해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경험들을 확인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성평등을 특별히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정책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추진되어 왔던 일반 정책에서 여성과 남성의 정책 욕구와 수요가 어떻게 다른지를 ‘발견’해 내는 일은 실제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인터뷰와 같은 질적 자료를 통해 차이를 ‘느끼는’ 일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분야의 양적 자료가 있고 양적 자료에 성별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성된 문항이 성불평등 문제와 관련된 의제를 포함하지 못한다면, 양적 자료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욕구와 수요를 찾아내는 일은 힘들기 때문이다. 성인지적 의제를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대한 다른 욕구가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질적 자료가 가지는 대표성의 문제와 일반화의 한계는 항상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V)

: 돌봄여성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

오은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I~V」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태동하던 2007년에 시작되어 올 해까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4년 간의 연구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를 어떻게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복지정책의 틀 속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의 전략적 산업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을 제기하여 왔음에도 여전히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관계는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와 희망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5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시장에 건강한 사회서비스 공급자 주체로써의 돌봄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 연구를 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급주체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다음은 본 논고의 주요 내용들이다.

첫째, 이탈리아 사례로부터 돌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한다.

둘째, 돌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일자리의 창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지역사회, 지자체, 중앙정부의 구체적 역할을 모색한다.

2.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로부터 도출 가능한 정책 시사점

1)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립

이탈리아의 컨소시아는 그 역할을 일반경영 지원과 사회적기업의 전망 제시, 기술적 지원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중 특히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일반경영지원은 컨소시아의 핵심적 역할로 꼽히는데, 이는 기업이 정신을 함양하고 경제정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기술지원에 해당하는 운영 지원과 같은 역할은 다른 특화된 조직들로 이관되며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중간지원조직도 단순한 행정상의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업종별 중간지원조직의 형성

이탈리아의 업종별 컨소시아는 업종에 대한 비전과 함께 경영의 노하우를 제시하며, 분야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종별 네트워크를 국내 중간지원조직에 분과형식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시사점은 개별 사회적기업에서 경영컨설팅에서의 실효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사정을 모른다”며 업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개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에도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경영컨설팅 등 실제적인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돌봄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시장의 형성

‘돌봄의 사회화’ 담론과 함께 성장한 국내의 사회서비스 시장은 정부 주도하에서 단기간 내에 확대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역시 정부 주도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요에 안정적인 공급체계로 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전체 산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역사가 오래된 선진유럽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협동조합이 전체 기업의 20%를 차지하며, 평균 규모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는 이탈리아의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는 이탈리아의 제3섹터, 협동조합은 이러한 안정적인 배경에서 괄목할 만큼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용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비물질적 가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생존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로 꼽히며, 이탈리아에서의 협동조합 평균 수명은 일반기업의 평균수명 13.5년에 비해 긴 17년이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황은 사회적기업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실증하며, 따라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기업의 규모와 운영 방안

사례연구에서 SPES라는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사회적기업의 구조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돌봄분야 중에서도 돌봄 대상의 다양화와 규모의 확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사(headquarter) 하에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의 시설을 가진 개별 사회적기업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시설과 함께 보건서비스의 컨소시아나 컨설팅 및 인력관리를 전담하는 개별기업 형식과 이를 합체하는 일종의 그룹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국내의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의 유지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창출로 자생하기 어려운 경우, 이와 같은 그룹 형식에서의 확장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수 개의 사회적기업이 이와 같은 그룹 형식에서의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윤창출에 실패한 한 과거의 선례를 돌아볼 때, 사례연구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지원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3.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미래 정책과제

사회복지체계의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유럽의 돌봄 사회적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한국적 상황은 이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이 건강한 돌봄 서비스 공급자로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한다. 사회서비스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사회적 기업들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대해서는 한국에서 향후 사회서비스체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제한된 예산 속에서 서비스 상품권(voucher)을 통한 수요창출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함께 시장형성에 실패한다면 제한적인 돌봄 시장에서 형성된 공급자 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별다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돌봄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은 영리업체 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과의 치열한 시장경쟁에 놓이게 되며 사회적 기업이 지닌 다양한 인센티브 구조가 전혀 작동되지 못한 채 무한경쟁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특히 돌봄 영역의 사회적 기업들이 자신의 인센티브 구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의 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 또한 돌봄 시장의 또 다른 공급자로만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돌봄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이 돌봄 분야의 건강한 서비스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단기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세부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사회적기업들이 건강한 서비스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함께 돌봄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체계에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의 변화: 맞춤형 정책 지원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의 기여에 대한 정책당국의 분명한 인정과 정책목표의 수립에 있다. 그런 점에서 돌봄 분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목표는 표적화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돌봄 사회적 기업이 한국사회에서 사회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한 공동

생산의 전략으로서 자신의 인센티브를 작동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해당 업종별로 필요한 내용을 표적화하고 총액수준을 일정하게 맞추는 다음 맞춤형 정책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책 1: 돌봄 사회적 기업을 선별하여 인건비 일부 지원 방식 도입

- 돌봄영역은 전기의 실태조사와 확산화 외(2010)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건비와 매출액의 차이가 적은 고비용·저부가가치 사업이다. 따라서 돌봄사회적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취약계층 고용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 그 자체는 충분한 국가 사회의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돌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일정 수준 이상 추구하고 건전한 경영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평가를 하고 이 평가결과를 지원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결과는 사실상 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지만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못하는 일부분을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돌봄사회적 기업에 한해서 현재 5년의 직접인건비 지원 제도의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 2: 핵심사업 개발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 모형 개발

-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의 부진은 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들로 하여금 정부 재정 지원사업 및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에 의존하도록 한다. 그러나 정부 재정 지원사업의 규모는 해당 사업별로 매해 다르기 때문에 인력수요 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외에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모형을 다각도로 개발해야 한다.
-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하지 않고 복합구조로 운영하는 방식은 사회적기업이 생존전략으로 고려해볼 사업 구조이다. 이 방안은 일정사업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는 방안이다. 안심생활 또는 휴먼케어 등은 사업을 다각화하여 생존전략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다. 안심생활의 경우, 노인 장기 요양사업과 장애인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병행하면서 돌봄사회적기업에서 수익창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또한 이 기업은 현대자동차를 연계기업으로 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인센티브 구조인 자원의 다각화에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다솜이도 역시 교보와 연계기업을 하며 다인간병 모형을 개발하여 수익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자원의 다각화는 사회적 기업의 생존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경영전략이라 사료된다.

정책 3: 돌봄 사회적 기업의 지역 내 업종별 협의체 지원

- 높은 노동집약성과 낮은 수익률의 특성을 지닌 돌봄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에게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돌봄 사회적 기업들이 많은 고용인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 운영에 요구되는 다양한 내부역량과 재정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돌봄 사회적 기업들의



업종별 네트워크의 지원을 통해서 이들 기업들이 지닌 약점들을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논의는 사회서비스가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도구로 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공재의 성격이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생성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부터 출발하지 못한 사회적기업은 그래서 상당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본 연구의 계량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 내 자원연계가 잘 된 기업일수록 고용근로자의 규모가 증가한다. 고용근로자 규모와 매출액은 높은 상관관계(0.7)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내에서의 자원활용이 기업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현재는 제한된 시장에서의 역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뿌리가 없는 사회적기업은 이 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렇다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정부는 중산층이 이용하는 민간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회서비스 시장은 서비스의 질을 최고급화하여 구매력을 높이는 영리기업과 차별화되지 않는 서비스로 정부재정지원 사업이나 사회 제도화를 통해 형성된 시장에 뛰어드는 비영리단체로 양분되는 듯하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이 두 시장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기업이 이 두 시장에서 생존전략을 갖기 위해서는 서비스질을 고급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을 통해 사회적 목적실현을 추구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부 재정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참·고·문·헌

- 객선화 (2010).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 김혜원 외(2006),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혜원, 박찬임, 이재원 (2009). 사회적 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달 연구. 노동부.
- (2010) "한국사회적 기업 정책의 형성과 전망". 『동향과 전망』. 75, 한국사회연구소.
- (2010)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현황과 쟁점. 제3회 한일사회적기업 포럼 자료집
- (2010)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의 성과와 정책과제". 『노동리뷰』 60. 한국노동연구원
- 문보경, 2011. 사회적기업의 현주소와 개선과제. 사회적기업법 시행 5년 정책토론회. 2011. 9. 22.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I)

: 대학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안상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대학생활과 성평등

문화는 매일의 삶으로부터 빚어지고, 이렇게 빚어진 문화는 개인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낸다(우영지, 이기학, 2011). 특히 성별문화는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형성되어온 사회문화적 성(gender)의 산물인 만큼 성불평등과 불가분의 관련을 지니고 있다(정자환 등, 1997). 성별문화를 통해 남성과 여성은 성불평등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며, 바로 그들 자신을 통해 불평등한 성별문화를 다시금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별문화는 개인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성별문화를 재생산하는 순환적 고리를 갖게 된다.

인간발달 단계에서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활 시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며, 장래 교육적, 직업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때이고, 자아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성관계와 진로에 대한 자아상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이현주, 2009). 이 시기에는 자아 정체성의 일부로서 성역할 정체감도 확립되는 결정적 시기라 할 수 있다. 성역할 정체감은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역할 정체감은 그 사회가 특정한 성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는 태도, 특성, 흥미 등을 동일시함으로써 형성된 자아개념의 일부라 할 수 있다. Josselson(1987)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대학시기에 확립된 자아정체감이 12년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 시기에 초점을 맞춘 「2011년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는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서의 성별 참여 현황, 대학 내 성별문화 등을 다루는 것은 물론 성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이성관, 결혼관,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들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 동아리 및 학과 활동, 음주 및 교우 관계 등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대학생의 활동참여 현황 파악, 활동영역별 남녀 대학생의 역할분배 양상 등을 통해 성평등 실천을 알아보았으며, 성평등의식, 대학문화, 성장 시의 성평등 양육환경 등이 의식과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 성평등의식과 실천이 ‘일’ 과 ‘관계’ 라는 인간 삶의 두 가지



중심적인 측면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생활에서의 대인관계, 특히 이성과의 ‘결혼관’ 그리고 ‘진로 및 취업’ 관련 요인에서 나타나는 성별차이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성희롱 및 데이트폭력의 발생이 성역할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고, 왜곡된 성문화를 사회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활 시기의 성별문화, 이성관계 및 성평등 실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로서 성희롱 및 데이트 폭력 발생 실태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대학생활에서의 성평등 실천 실태

대학생활 시기의 성평등 문화와 실천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교육과학부 2010년 교육통계를 표집틀로 삼아 전국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 5,555명(대학생, 5021명; 대학원생, 534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소속된 조사원들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남녀평등의식검사(KGES, 김양희, 정경아, 1999)의 20개 문항으로 측정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성평등의식은 평균 2.84점이었으며, 여학생은 2.94점, 남학생은 2.71점이었다. 이러한 평균점수는 30대 이상의 다른 연령대를 비교한 이전 연구들에 비해서 물론 높은 것이긴 하지만, 동일 연령대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11년 조사결과가 성평등의식 향상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2008년 일반국민 대상 성평등 의식조사(국민 양성평등의식조사, 2008)의 20대 평균 2.81점과 유사하고, 2010년 20대 직장인(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Ⅱ): 직장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2010) 남녀평균 2.97점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표본 특성의 차이나, 실제 성평등의식의 저하를 야기할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따를 수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조사결과처럼 성평등의식의 변화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의 실태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추이를 파악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성평등 의식을 학제별로 비교하였을 때, 일반 4년제 대학(평균 2.85점)과 전문대학(평균 2.85점)에 비해서 교육대학(평균 2.68점)의 성평등의식이 낮은 것이 주목되었고,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평균 2.58점과 2.75점으로 전체 남녀 대학생 2.71점과 2.94점에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영역별로 보면 이공계의 성평등 의식이 예체능계나 인문사회계에 비해서 낮았고, 전공계열별로 좀 더 나누어보면, 사회과학계열 평균 2.88점, 법학계열 평균 2.86점인데 비해 공과계열 2.76점, 사범계열 2.77점으로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과계열이나 사범계열, 교육대학 등에서의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학생활의 수업, 동아리, 학과, 음주, 교우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서 남녀 대학생이 어떠한 양상의 참여를 보이는가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다. 각 활동별로 전체를 10으로 보았을 때, 참여 정도를 보고하도록 한 결과, 수업영역의 활동들을 보면, ‘조별과제 조장 맡기’의 경우,

남학생은 10회 가운데 3.58회를, 여학생은 10회 가운데 2.85회를 참여한다고 보고하였고, ‘조별과제의 PT 발표자’ 역할은 남학생이 3.81회, 여학생은 3.28회; ‘수업 준비물이나 휴강여부를 공지하는 수업반장 역할’은 남학생이 2.57회, 여학생은 1.85회; ‘강의실 마이크 사전점검 및 빔프로젝트 켜기’는 남학생 2.37회 여학생은 1.60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및 학과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책상, 책장 등 무거운 물품 옮기기’는 남학생 4.50회, 여학생은 2.23회 참여를 보였고, ‘MT 장소 사전답사 및 장소예약’의 경우, 남학생 2.62회, 여학생 1.70회 등으로 이들 활동에서 남학생의 참여가 많은 양상을 보인 반면에 ‘조별 과제 PT 자료 만들기’ 남학생 3.93회, 여학생 3.97회; ‘학과행사 시 식음료 및 다과준비’ 남학생 2.24회, 여학생 2.39회; ‘학과 행사 안내데스크 도우미’는 남학생 2.31회, 여학생 2.15회로 고정관념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활동에서만 여학생이 높은 참여를 보이거나 남학생과 유사한 정도의 활동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활의 여러 활동에서 여학생들의 참여가 남학생들에 비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학생들은 고정관념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활동들에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중요도가 낮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활동에서만 참여의 남녀차이가 작게 나타나는 양상의 성별분리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관념적으로 남성의 일로 간주되는 활동에 남학생의 참여가 높고,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활동에 여학생의 참여가 높은 명백한 형태의 성별분리와 비교해 보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느슨한 형태의 성별분리가 성평등 관점에서는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느슨한 형태의 성별분리가 대학생 시기에는 잠재하였다가 취업이나 가정생활 시기에 돌입한 이후, 확대 재생산될 개연성은 2009년 및 2010년의 성평등 실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대학 내 활동 참여 양상과 함께, 남녀에게 역할을 배분하는 양상을 살펴본 결과, 활동 참여에서 성별분리보다 역할배분에서 성별분리 양상은 좀 더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조별 PT 발표자’, ‘동아리 총회 기획 및 준비’, ‘MT 장소 사전답사 및 예약’, 대학원생의 경우 ‘학회 및 세미나 참석 시 운전’, ‘지도교수 학회참석 장거리 출장 동반’,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수리’ 등의 활동에 대한 역할배분의 경우, 남학생에게 역할을 할당하는 정도 크게 나타났으나, ‘조별모임 토론내용 정리’, ‘PT 자료 만들기’, ‘동아리방 생활용품 구매’, ‘전공교실 운영비 입출금 및 영수증 관리’ 등은 주로 여학생에 배분하는 양상이 강하였다. 역할배분 상황을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 영역에까지 확대해서 살펴 본 결과, ‘핵심업무 내용분석 및 기획’과 같은 업무는 남성에게, ‘고객서비스 및 상담’은 여성에게 역할배분이 두드러졌고, 미래의 가사활동 참여 의사를 알아보는 과제의 경우, 대부분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가사활동은 여학생의 참여의사가 남학생에 비해 높은 반면 비일상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가사활동들은 남학생의 참여의사가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학, 직장, 가정생활 상황에서 고정관념적 성역할 분리는 성평등한 대학문화, 성평등한 양육환경, 각 개인의 성평등의식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역할 분리의 이중적 구조를 재구조화할 만큼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고정관념적 성역할 구분에 따라 역할이 부여되는 현상은 대학 내 수업 활동에서부터 수업 외 과외 활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매우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학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실태를 알아 본 결과, 전체 여학생의 26.7%가 지난 1년 동안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성친구가 있는 응답자의 약 8%는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데이트폭력은 교제 후 1~3개월 사이에 데이트 폭력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데이트 폭력의 상대방과 결혼의사는 높지 않았다. 성희롱 가해자는 학교생활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남학생 응답자는 여학생 응답자에 비해 성희롱의 원인을 피해 당사자의 잘못으로 보고,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도 더 관대한 경향을 보임으로서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남학생들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남학생들에 비해 본인이 원치 않는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을 성희롱으로 보는 인식이 높았으나 성희롱의 발생 원인을 피해 당사자인 여성에게서 찾는 경향은 예방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바뀌지 않았으며 이는 대학에서 실시되는 예방교육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대학생들의 결혼관을 알아 본 결과, 여학생들은 결혼보다는 사회적 성공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희망 연령은 남학생이 30.36세, 여학생이 29.14세 였다. 배우자 선택기준으로 남녀 모두 '성격'을 가장 우선시하였으나, 다음 순위로 남학생은 '외모', 여학생은 '직업 및 경제력'을 중요하게 꼽음으로써, 성역할에 따른 기대의 차이가 결혼관이나 이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여학생들은 장래 취업 가능성을 남학생에 비해서 낮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인문사회계열 여학생들이 특히 취업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직장가 가정에서의 역할, 배우자로서의 역할과 다중역할갈등을 남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진로 스트레스와 성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남학생들에 비해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에서 남녀 대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삶의 질 척도(표승연, 한덕웅)에서 여학생들은 평균 2.78점으로 남학생의 평균 2.87보다 낮은 낮았다. 대학생의 삶의 질을 예언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통제변수들 가운데서는 학업성적이나 성취동기가 삶의 질을 정적으로 예언하는 반면, 개인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측변수들 가운데서는 취업가능성이 낮을수록, 성차별의 두려움이 클수록, 경력야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의 관습적 제약이 클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 중 특히 여학생에 집중되는 제약요인들이라는 점에서 여학생의 삶의 질이 대학생활 시기임에도 고단한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3. 성평등한 대학문화 만들어 가기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 사회나 대학생활에서의 성별구조를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재편시켜 나아가고,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적용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임용 교수 및 신입생 대상의 양성평등교육의 의무화 추진', '남녀 대학생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강화',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에서 양성평등 환경개선 관련 지표를 도입하여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각 대학은 대학 내 성별 불평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나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영국의 각 대학들은 2006년에 제정된 평등법(The Equality Act)을 근거로 성평등제도(Gender Equality Scheme)라는 명칭의 대학내 성평등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매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대학본부의 주도 아래 목표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 계획에는 학생 및 교수의 지원, 복지, 대표성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성 위원회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관련 통계를 모니터링 함은 물론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을 평가하는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여교수 비율의 불균형을 해소, 학문분야별 성별비율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각종 위원회 및 대학 내 정책에 대한 여교수 참여율 제고,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공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게시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의 경우도 여성발전기본법 2조 1항 1호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에 대학 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학을 대상으로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평등한 대학문화가 성평등 실천에 중요한 요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성평등의 진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마땅한 지표가 부재하고, 각 대학들은 대학 내 양성평등적 환경 조성의 수준을 점검할 만한 상태이다. 최근 일본의 오차노미즈대학은 오차데 인덱스(Ochadai index)를 개발하여 일본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들에도 보급하고 있다. 오차데 인덱스에는 ‘여교수 및 여성 연구자 채용 목표치 연구분야별 설정’, ‘연구분야별 및 직급별 여성비율 파악’ 등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근무체제 정비 부문에는 ‘정시 퇴근’, ‘회의 시간(5시 이후 회의개최 또는 연장 불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전 교직원의 일-가정양립에 관한 조사’ 등이 포함되었으며, 육아보육지원 부문에는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수유실, 다목적 화장실 설치’, ‘양육지원용 학내 숙박시설’ 여부 등의 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 항목은 국내의 여성 정책 환경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들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국내 각 대학의 정책담당자 간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문별 지표 항목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 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

김은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원은 지난 30년간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을 뒷받침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이라는 다차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지난해인 2011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 사업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현장 사업과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젠더 분야 한국 ODA 정책의 발전 및 선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협력국가 선정에 있어도 한국 정부의 ODA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부합되고 아시아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두 국가인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1차 연구사업(2011년~2012년) 대상국가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본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I)」

: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정책전문가들의 역량강화 워크숍 모듈 개발(2011)

위 연구는 다차년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적 ODA 사업의 일차년도 사업이다. 인적자본론과 인간능력접근(Human Capability Approach) 이론에 기반하여 진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들의 역량을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로 간주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들의 역량강화가 현지의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 및 여성의 지위 향상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캄보디아·인도네시아 현지 수요 맞춤형 정책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모듈 개발

2011년도 연구에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양성평등정책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 2주 간의 국내초청 워크숍(2011. 9. 18~10. 1)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실시하였다. 2011년도 워크숍 개최까지의 준비과정과 내용, 그리고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집약하여 정리함으로써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모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1년도 워크숍 모듈을 개발하는 과정은 협력대상국 선정, 현지 수요조사 실시, 현지 전문가 간담회 실시,

워크숍 기획, 워크숍 실시, 협력대상국과의 환류라는 일련의 추진 과정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본 워크숍은 현지 맞춤형 워크숍으로 기획되어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지와의 면밀한 의사소통 과정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이는 본 워크숍의 큰 특징이다.

우선, 현지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3월~5월에 걸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현지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법제도화나 실천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는 여성폭력 철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정책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분야와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이 잘 안된 분야로서 나타난 분야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캄보디아 전문가들은 여성정책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분야로 여성폭력철폐 분야,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이 잘 안된 분야로서 농어촌 여성/정치참여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성정책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분야로 정책의 성주류화,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된 분야로서 여성폭력철폐/여성의 고용 및 창업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여성 인권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이 2011년도 워크숍의 세부 주제로 선정되었다.

이후, 현지에서 각 세부 주제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지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을 위해 역할할 수 있는 실행주체를 확인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한국과 대상국의 양성평등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워크숍 초청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현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성 인지적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한 공통과목과 세부 주제 분야별 심화된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워크숍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우선, 공통과목으로 KWDI 설립배경과 한국여성정책의 기여도, 아태지역의 발전과 성평등,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 경험,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과정, 양성평등의식 점검과 성역할, 성 주류화 정책과 도구, UN CEDAW 보고서 작성과 실행, 정책협력 네트워크 수립 방안 및 전략, 젠더와 리더십, 정책화 경험과 방법 등의 강의를 포함되었다. 한편, 선택과목에서는 참석자들의 관심 주제 분야별로 심화된 강의와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분야별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시설 견학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젠더 관련 이슈와 여성정책 발전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도 워크숍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워크숍을 통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들의 진정한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워크숍 참석자들이 미리 준비해온 정책이슈 노트를 정책제안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정을 워크숍에 포함시킴으로써 참석자들이 주도적으로 현지의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충분한 토론과 정책화 방법에 대한 코칭이 이루어짐으로써 뒷받침될 수 있었다. 더불어 워크숍 참석자들을 선정함에 있어 정부, 학계, NGO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석자들 간 양성평등 정책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한국의 젠더분야 ODA 사업이 초청연수 사업에 집중되어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워크숍 모듈의 제시를 통해 젠더분야 ODA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젠더분야 ODA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본 연구보고서는 워크숍 과정에서 개발된 참석자들의 정책제안서와 그 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젠더 분야 ODA 지원전략을 제시한다. 우선, 워크숍 참석자들의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수행 가능한 정치·경제·인권 분야의 ODA 젠더사업 주제 및 국내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정치·경제·인권 분야별 ODA 젠더사업 주제

분 야	협력국가	정책제안서 주제	본원과 협력가능한 국내기관
정치적 역량강화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정치인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증진 및 세력화를 위한 방안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방법과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및 지역구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의 증진 한국의 공직선거법 발전과정과 선거풍토 변화 총선여성연대 및 시민연대 활동을 통한 선거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치학회
경제적 역량강화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전환 등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민관협력을 통한 취업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제시 여성개발센터(WDC)의 지속적 활용방안 (한국의 여성가족부 및 노동부와 협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KDI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교육과 ICT연수를 통한 농촌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능력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성 인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법적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국의 원스탑(one-stop)서비스 성폭력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실행도구로서 미디어 모니터링 방법과 활용방안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 공동실시 한국여성운동과 정부·의회의 국 거버넌스 사례 및 전략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 법무부 원스탑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더불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젠더분야 사업에 대한 발전적 정책 제언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우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젠더분야 ODA 사업은 연수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국가별 현황에 맞춰 보다 세분화된 연수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일회성 초청 연수사업에서 더 나아가 보다 규모 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보다 면밀한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 구체적인 사업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한국 여성정책 연구기관 및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같은 양성평등의식 교육기관을 벤치마킹한 기관설립 프로젝트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 설립 사업을 통해 대상국의 중장기적인 여성정책 발전을 도모하고, 기존의 한국의 젠더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사업 역시 이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2.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I) :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여성정책 모듈개발(2012)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초청 워크숍의 모듈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발전·심화시키고 좀 더 구체적인 현지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의 모듈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지 연구자와의 협력을 통한 현지 정책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치·경제·여성인권 분야의 보다 구체적인 세부 주제별 현지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이 모듈화 되어 제시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사업을 통해 현지 여성부와 국내 관련부처(여성부 외)간 회의를 주선하고, 현지 정책수요와 한국 ODA 정책 및 지원 간 연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더불어 현지 단기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현지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역량강화와 2011년도 사업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UN Women, UNESCO, UNDP 등 국제 공여 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 개발협력 사업과 현지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한다.